

# 코로나로 드러난 인권 현안은..."자영업자 재산권 침해"

입력 2023.02.18. 오전 9:05 수정 2023.02.18. 오전 9:20



[연합뉴스 자료사진] ※기사와 관련 없음

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당시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를 꼽았습니다.

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'를 최근 발간했습니다. 인권위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만6천14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.

18일 보고서에 따르면 '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



권 문제는 무엇이나'는 질문(1·2순위 복수 응답)에 44.3%가 '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'라고 답했습니다.

'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·노인·아동 등 취약계층 고립'을 꼽은 응답자는 43.5%로 두 번째였습니다.

이어 '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'(28.2%), '개인 정보·사생활 침해'(25.7%), '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'(23.9%), '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'(18.5%), '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·차별 증가'(10.7%) 등 순이었습니다.

연령대별로도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. 20~30대층에서는 '백신·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', '개인정보·사생활 침해'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은 비율이 각각 30.8%, 27.7%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2.6%p, 2.0%p 높았습니다.

60대 이상에서는 '취약계층 고립', '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'이 각각 45.6%, 29.1%를 차지해 전체 평균 대비 2.1%p, 5.2%p 높게 나타났습니다.

'인권 상황에 코로나19가 영향을 줬느냐'는 질문에는 56.4%가 '그렇다'고 답했습니다.

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(1·2순위 복수 응답)으로는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(37.6%), 감염 예방·위생 관리(33.9%),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(31.1%), 사회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·고립감(28.0%), 백신·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(20.5%), 휴직·실업 등 일자리(19.9%)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



엄하은 기자(eomha@sbs.co.kr)

Copyright © SBS Biz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---

**이 기사 주소**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74/0000323405>

---